

1인가구·맞벌이 등 소득기준 완화... 178만 가구 추가지급

기재부, 재난지원금 34.9조 확정

지급범위 소득 기준 80→88%로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지급대상 65만곳 추가돼 178만곳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은 1억2000만원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재난지원금을 받는 1인가구·맞벌이 가구는 기존보다 178만 가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정부안(33조원)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4일 확정, 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등은 2조6000억원을 늘린 반면 소비 쿠폰 등은 7000억원 줄였다. <관련기사 6면>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기존 소득 하위 80%보다 지급 대상을 늘리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정부안인 1인당 25만원 지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1인가구는 은퇴한 노인 가구 비율이 높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낮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기존 정부안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연봉 약 4000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고령 인구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을 연봉 500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는 소득 기준 80%에서 88%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 가구도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된다.

결국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주장한 정부는 힘겨루기 끝에 '88%' 지급에 타협을 본 것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기준 정부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적용 대상은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이다. 주점, 료샬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지급 대

상은 65만곳 추가돼 178만 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2000명에게도 80만원을 지급한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 지원한다.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원 줄였다.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카드 캐시백의 경우 대면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인데 방역 상황에 맞춰 시행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시기를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국제 상황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신용등급 유지, 국제시장 영향 등을 고려했다. 추가되는 국제 발행은 없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시행

비수도권 확진자 546명 38% 차지
휴양지·해수욕장 등 야간음주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일째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주말 최다치를 다시 갈아치우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14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주일전인 지난 토요일 1454명

을 뛰어넘은 주말 기준 역대 최대치다. 서울 478명, 경기 315명, 인천 83명 등 수도권에서 876명의 확진자가 발생, 전체 61.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날 비수도권 확진자는 546명으로 전체 38.4%를 차지하며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10% 안팎이던 비수도권 비중은 최근 일주일 넘게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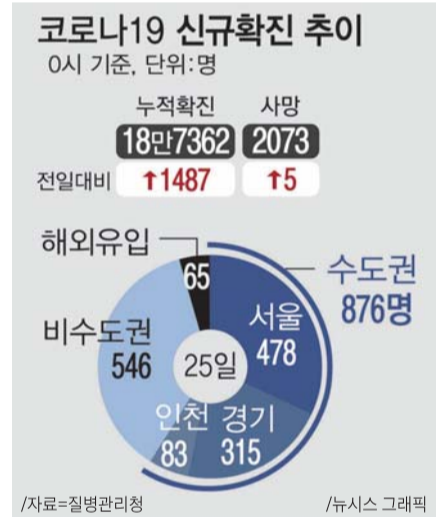
일괄 3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7일부터 8월8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8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은 예외로 하지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차제 조정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

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에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홍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이재용 출소땀 美 대규모 투자발표 기대

>> 1면 '또 파운드리 분사설'서 계속

올 초 약속했던 의미 있는 M&A 역사가 없다. 오랜 기간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후보군에 올랐지만, 반도체 부족 현상에 이미 인수 골든타임을 놓쳐 비싼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그 밖에도 그렇다할 움직임은 없다는 전언이다.

관건은 이재용 부회장 거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평택 반도체 공장 등에 광폭 투자를 이어가며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 덕분에 역대급 실적을 거두는 데도 성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부회장 수감으로 인해 그렇다할 투자에 나서지 못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계속 놓치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이 부회장 8.15 가석방 가능성이 나온다. 여전히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부회장 출소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이 출소하면 당장 미국 공장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인수 합병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심거리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오게 된다면 공장 등 거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에도 제약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각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사면해 경영 활동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